■ 민족문화연구 제85호(2019.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527-556.
http://doi.org/10.17948/kcs.2019..85.527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과 '옥심상점'*

이준희(李俊熙)**

목 차

1. 머리말
2. 정전 이전 국가상업과 민간상업의 실태
3. 전후 사회주의 상업체제 강화와 '옥심상점'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50년대 북한의 상업정책을 분석하면서 개인상공업자의 쇠퇴와 국가상업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1958년 8월 완료된 개인상공업 협동화 완료는 국가상업과 개인상공업자 간의 경쟁 과정이었다. 해방 이후-전쟁 시기 북한정부는 개인상공업자들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기도 했으나, 빈약한 국가상업망의 보조적 역할을 개인상인들에게 부여하면서 공존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정부는 전후복구의 성과를 확인한 이후 개인상인들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 양곡부문을 장악해 나가면서 개인상인들의 자본유입을 차단하고 그 자리를 국영상점과 소비조합으로 대체하려했다. 1955년 이후 농업협동화의 성과로 인민의 구매력 점차 상승하자 상품공급에 대한 여건 개선이 요구되었다. 정부는 '사회주의 상업'을 실시함

* 이 논문은 2018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제주대 사학과 강사.

에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재생산에 초점을 두고 상품폰드와 구매폰드의 균형적 교환을 구조화시키고자 했다. 또한 구매폰드의 비조직시장 유입은 곧 계획경제의 차질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개인상인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가상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1955년에 등장한 김옥심의 '옥심상점'은 전쟁 직후 상업망에 인입된 상업일꾼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전국적인 모범 상업일꾼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옥심의 사업방식은 정부의 상업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개인상인들의 사업방식을 모방하고 발전시키면서 농업협동화 이후 성장한 농민들의 소비규모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농민들의 소비처를 비조직시장에서 조직시장으로 끌어들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재생산구조의 확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1950년대 북한정부의 상업정책은 계획경제를 위한 사회주의 재생산구조 확립에 방점을 두면서 인민의 증산을 위한 하나의 기재였다.

주제어: 북한, 상업, 사회주의 상업, 소비조합, 개인상인, 시장, 김옥심, 옥심상점, 국가상업, 상업망.

1. 머리말

해방 직후 북한정부는 토지개혁·산업국유화를 실시하여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관계 재편을 통해 경제부문에서 인민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를 구성하고 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계획적 경제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소비관계에서도 1946년 5월 소비조합 조직을 시작으로 국영상업을 실시하여 개인상공업자들과 경쟁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고자 했다. 북한정부의 소비조합 조직과 국영상업 실시는 '사회주의 상업'[1]의 시작이었다. '사회주의 상업'의 목적은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상업이자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데' 있었다.[2]

1) 민주상업사, 『쏘베트 상업과 쏘련에서의 시장』, 민주상업사, 1949, 13-14면. "쏘베트상업이란 무엇이냐? 쏘베트상업이란 적던크던 자본가가없는 적던크던 투기업자가없는 상업이다 이 특수한종류의 상업은 력사에서 일찍이보지못하던것으로서 우리들 볼쉐위끼가 처음으로 쏘베트적발전의 조건하에서 실천하고있는 상업이다.(쓰딸린 "레닌주의제문제" 10판 505페지)"; 리상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상업의 역할과 당의 상업 정책』,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9, 2면. "사회주의 상업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창설되고 국가 주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새로운 조건 하에서 발생한 상업으로서 이것은 인류 력사상 전혀 새로운, 가장 선진적인 상업 형태이다."

1946년 말 전체 주민 구성의 3.3%인[3] 개인상인이 유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6.5%로[4]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개인상인은 북한 전체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실시는 '기조'에 가까운 정책 실시였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쳤고 국가상업망의 확충과 소비조합을 중심으로 한 국영상업의 확장은 개인상공업자와(민간상인) 경쟁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정부는 사회주의 이행기였던 1945년-1958년간 전국단위에서 주체적으로 상업망을 확충할 수 없었으며 도시와 농촌에 충분한 상품을 유통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상공업자들의 상업 활동을 허용하였다.[5] 그러나 북한정부는 자본주의 사회 상업(상인)에 대해 유통을 통한 이익창출로 노동자·농민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또는 중간착취자로[6] 여겼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적 측면인 '자본 축적을 통한 자본주의적 상업으로의 발전'을 제한하면서 유통망 확충이라는 긍정적 측면만 이용하고자 했다.

한편 북한정부는 개인 상인들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었는데 이는 개인상인들의 자본주의적 상업 활동을 경계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국영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자본 회수 비율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각종 원조 상품과 국영기업 상품의 소매가격 내 '거래세'[7]를 통한 자본

2) 리상선, 앞의 책, 1959, 67면.

3)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 경제 및 문화 발전 통계집』, 국립출판사, 1958, 15면.

4) 리상선,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하여」, 『근로자』 제7호, 근로자사, 1956, 35면.

5) 「商業 및 商業發展에 關한 法令」, 臨時人民委員會 決定 제112호, 1946.11.25. "제1조 본 법령은 개인소유 및 개인의 자유로운 창발적 활동을 보장하여 상업의 정상적 발전을 장려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6) 안함광, 「상업과 문화」, 『소비조합』 5, 북조선소비조합출판사, 1948, 33-36면.

7) 소련 자료에 의하면 소매가격구조는 생산원가, 거래세, 공업리윤, 공업인도가격, 운수비를 포함한 상품리득이 더해져 소매가격을 결정한다. 거래세는 "임의의 상품가격에 있어 국가예산으로 들어가는 사회주의적 축적의 계획적으로 설정된 부분이다.", "거래세를 통하여 각경제부문간 및 축적기금과 소비기금간에 화폐소득의 재분배가 수행된다. 각개별상품의 가격은 반드시 그 생산가격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가치로부터의 가격의 背離는 인민소득의 재분배의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보다더 커진다." 민주상업사, 앞의 책, 1949, 33-35면; 엄재언 편, 『상업독본』,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9, 113면; 리상선, 앞의 책, 1959, 10면.

회전 과정에서 국가상업망을 벗어나 거래되면 계획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위협받아 사회주의적 재생산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개인상인을 억제·압박하는 동시에 소비조합·국영상업을 촉진시켜 사회주의 재생산구조를 확립해야 했다.

지금까지 북한 상업에 대한 연구는 한국전쟁 이전에 치중되어 있으며, 전후 연구도 최근에야 발표되었다. 한국전쟁 이전 북한 상업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성직은 반공적 입장에서 북한정부의 개인상공업 말살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8] 김성보는 1946년 토지개혁 이후 국가·소비조합·시장을 축으로 한 양곡유통구조에 대한 과정을 주목했다.[9] 김보영은 해방 이후 남북한의 정식교역과 밀무역을 통해 단일경제권에 있음을 밝혀냈다.[10] 김재웅은 해방 직후 북한의 민간상업 통제정책과 상인층의 대응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내놓았다.[11] 이 연구는 상세한 사례를 통해 국가의 정책을 보여주었다. 이주호는 해방 직후 소비조합의 정책과 실태를 논하면서 사회주의사회 일반적 변화과정이 북한에서 어떻게 수용·변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12] 전후 연구로는 조수룡의 연구가 돋보인다. 전후 북한정부의 억압적 민간상업정책을 상세히 정리하면서 개인상공업자들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편입 과정을 밝혀냈다.[13]

기존의 연구는 한국전쟁 이전 북한정부의 양곡유통, 민간상업정책, 협동조합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전후 연구도 민간상업 억압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비조합·국영상업의 확장과 발전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해방 이후 북한정부가 상공업 정책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데

8) 조성직, 「北傀의 商工業政策—個人商工業을 中心으로—」, 『北韓總鑑』,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9)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2000.
10) 김보영, 「해방 후 남북한 교역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
11) 김재웅, 「북한의 민간상업 통제정책과 상인층의 대응(1945-1959)」,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12) 이주호, 「1945-1948년 북한 소비조합 정책의 전개」, 『역사와현실』 제96호, 한국역사연구회, 2015.
13) 조수룡, 「정전 후 북한의 사회주의 개조와 민간 상업의 몰락」, 『역사비평』 제124호, 역사비평사, 2019.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기존 민간상인들의 붕괴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상공업 정책이 민간상인 억제정책으로만 설명되고 있어 북한 정부의 상업정책 전망과 실제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1950년대 북한의 상업정책을 살피면서 민간상인을 대신할 국가상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밝혔듯이 북한정부는 한쪽에서는 소비조합·국영상업과 민간상업의 경쟁을 유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간상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개인상인들을 '사회주의 상업'망 속에 인입하여 '근로자'[14]로 전환시키려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의 상업정책을 살펴보면서 북한정부의 개인상인들에 대한 억제정책과 함께 '사회주의 상업'의 발전양상과 하나의 모범으로 부각되는 평안남도 안주군 '룡연상점'의 점장 김옥심을[15]을 살펴본다. 김옥심은 1953년 소비조합 점원으로 등장하여 1955년 이후 전국적인 상업 모범 노동자로 주목받게 되었다. 김옥심의 '옥심상점'은 전국 상업 노동자들의 견학장소가 되었으며 1958년 8월 평양 중앙 제1백화점 지배인으로 일하게 되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된다. 1955년 이후 김옥심의 사례는 '사회주의 상업'의 봉사성 향상을 위한 모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를 통해 민간상업과 국가상업의 경쟁관계와 국영상업·소비조합의 개선 및 확장과정과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전 이전 국가상업과 민간상업의 실태

1) 한국전쟁 이전 국가상업과 개인상공업자의 경쟁

해방 직후 38선 이북지역의 상업은 민간상업이 주도하고 있었다. 일제 강점으로 인한 상공업 성장의 한계는 분명했지만[16] 평양 등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장과 행상들의 존재는 북한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성

14) 리상선, 앞의 글, 1956, 40면.
15) 김태경, 「상업부문 문화 봉사성 제고에서 얻은 김 옥심 동무의 몇 가지 경험」, 『집단적 혁신을 위하여』, 직업 동맹 출판사, 1958.
16) 리상선, 앞의 글, 1956, 39면.

하고 있었다.[17]

또한 38선 이남지역에 경공업지대가 편중된 까닭에 북한은 항시적으로 소비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양곡유통도 원활하지 못했다. 접경밀무역을 통해 소비재가 일부 유통되고 있었으나 생필품 부족현상은 쉽게 타개하기 어려웠다. 접경지역 상인들은 환차익과 물품의 등귀현상을 매개로 하여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고 북한정부는 이들을 통제하는 한편 상품의 유통을 위해 방관하기도 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18]

북한정부는 당시 '사회주의 상업'정책의 일환으로 1946년 5월 소비조합을 창설, 동년 6월 국가상업을 창설하여 민간상업을 견제하고 국가상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1946년 6월 국가상업망으로서 평양 제1 국영백화점 하나밖에 없었던 시기 개인상업망은 32,000개에 달하여 1946년도 국내 총 상품 유통액 중 개인상업은 96.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국가상업망의 규모는 민간상업의 경쟁상대가 아니었다.

〈표 1〉 1946년 말 공업 총 생산액·소매 상품 유통액 통계[19]

공업 총 생산액의 경제 형태별 구성		소매 상품 류통액의 소유 형태별 구성	
1946년 말 현재		1946년 말 현재	
공업 총 생산액	100	소매 상품 류통액 총계	100
그중 사회주의 경제 형태	72.4	그중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	3.5
소상품 경제 형태	4.4		
자본주의 경제 형태	23.2	개인 상업	96.5

이에 따라 북한정부는 1946년 4월 13일 임시인민위원회 상업국 포고 제2호 「商業機關에 關한 命令」[20]과 1946년 11월 25일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12호 「産業 및 商業發展에 關한 法令」을[21] 공포하여 상사회사 등 상업기관과 개인상

17) 김재웅, 앞의 글, 210-214면.
18) 김재웅, 「북한의 38선 접경지역 정책과 접경사회의 형성」, 『한국사학보』 제28호, 고려사학회, 2007.
19) 남춘화,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8.15 해방 15주년 기념 경제 론문집』, 과학원출판사, 1960, 99-100면 표 재구성; 민주상업사, 앞의 책, 1959, 15-16면.
20) 정경모 외, 『北韓法令集』 제3권, 大陸硏究所, 1990, 1822-1824면.
21) 같은 책, 1818-1821면.

인의 상업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상업국 포고와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상업기관 및 상업 활동에 있어 정부의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상업기관을 파악하고 불법적 상행위를 근절하여 민간상업을 견제하였다.

정부 주도 소비조합의 창설과는 별도로 1946년 7월 13일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38호 「商業組合令」이[22] 공포되었다. 「商業組合令」의 목적은 각 시·군 상업조합, 도 상업조합 등의 계열적 조직을 통해 동종업에 종사하는 전체상인들이 조직하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자유상업을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商業組合令」은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는 물론 농촌과 지방 소도시의 상업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의 지방 상업망 파악에도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인들은 오히려 조합령을 이용하여 민간상업망을 확장하고 소매상점들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와 개인상인들의 자본축적 도구가 되었다. 더하여 상업 간부와 개인상인 간의 부정부패에 따라 상업조합은 조합령의 목적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이에 따라 「商業組合令」이 공포된지 약 8개월 만인 1947년 3월 11일 인민위원회 결정 제4호 「商業組合令取消에 關한 決定書」가[23] 나오게 되었다. 북한정부가 갖고 있었던 상인에 대한 태도가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였으며 정부의 느슨한 태도로는 개인상인들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없음을 깨닫게 했다.

1947년 1월 28일 「價格票示規程에 關한 件」, 2월 3일 「商店許可制 實施에 關한 布告」, 「人民市場規程 實施에 關한 布告」[24]를 실시하여 개인상인들의 상행위를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 인입시키고자 했다. 또한 정부 내의 정권기관과 국영생산공장 및 기업소에서 국가상업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시장(개인상인)에 판매하여 상품유통망의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1948년 12월 16일 내각결정 제84호 「비상업기관 상품판매금지에 관한 결정서」[25]가 공포되었다. 북한정부는 민간상업의 개인상인들과 정부

22) 전용식,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상업의 발전」, 『인민 경제의 발전(론문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1954, 194면; 정경모 외, 앞의 책, 1826-1827면.
23) 정경모 외, 앞의 책, 1828면.
24) 같은 책, 1848면, 1830-1835면.

내 생산기관의 비합법적 상행위를 규제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공포하면서 민간상업망을 통제하고자 했다.

한편, 북한정부는 민간상업의 급성장을 견제하면서 소비조합과 국영상업의 확장을 도모했다. 소비조합은 창설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다. 1946년 5월 전국의 소비조합원의 수는 1,066,879명이었으나 1947년 말 4,880,364명으로, 1949년 말에는 5,655,865명으로 약 3년 6개월 만에 5.3배가량 급격히 성장했다.[26] 소비조합원의 증가는 정부의 '민주개혁'조치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으며 지역 단위까지 전개된 소비조합 가입 권유와 조직구성 활동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27] 또한 정부는 "국가 생산품에 대한 국가 상업 및 소비 조합 상업의 유일판매"를 결정하고 양곡을 비롯한 농수산물 등을 적극 수매하여 국가상업망에 인입시켰다.[28] 이러한 조치는 소비조합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비조합을 중심으로 비조직시장의 상품을 조직시장에[29] 인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인상인들의 상품원천을 차단하고 소비조합에 상품을 집중시켜 인민의 소비처를 점차 단일화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품유통망의 통제는 영세수공업자들이 형성한 시장과 관계있었다. 북한정부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1947년 생산협동조합을 발족시켰다.[30] 생산협동조합의 발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정부는 영세수공업자들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낮은단계의 협동조합모델을 시장에 형성하면서 사회주의를 선전하고자 했다. 또한 개인상공업자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개인상공업자들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증산을 유도했다. 이미 '민주개혁' 조치로 주요산업시설이 국유화 되면서 대체로 공산품 생산은 국가통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10% 남짓한 상품생산시장을 생산협동

25) 같은 책, 1837면.
26) 김원삼, 『우리나라에서 협동 단체 상업의 발전』, 과학원출판사, 1962, 15면.
27) 이주호, 앞의 글, 307-308면.
28) 리상선, 앞의 책, 1959, 17면.
29) 조직시장은 국영상업, 협동단체 상업망을 비롯한 국가상업망을 의미한다. 비조직시장은 농민시장을 포함하여 개인상업, 암시장 등을 의미한다.
30) 남춘화,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8.15 해방 15주년 기념 경제 론문집』, 과학원출판사, 1960, 103면.

조합 중심으로 국가에 인입시키고자 했다. 또한 소비조합이 생산품을 전량 수매하면서 기왕의 상품유통의 중간착취구조에서 '해방'시켰다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었고 나아가 '사회주의 상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1948년 말 생산협동조합의 업종은 44종이었는데 1949년 말에는 64종으로 증가했다. 눈에 띄는 성장은 아니었으나 생산협동조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생산협동조합은 소비조합의 한 형태로서 구성되었지만 1950년 3월 독자적인 지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수산협동조합은 1948년 4월에 발족하여 1950년 6월 말에 이르러 조합 수는 창설 당시에 비해 149%, 조합원 수는 145%로 각각 성장했다.[31]

〈표 2〉 1949년 말 공업 총 생산액・소매 상품 유통액 통계[32]

공업 총 생산액의 경제 형태별 구성		소매 상품 류통액의 소유 형태별 구성	
1949년 말 현재		1949년 말 현재	
공업 총 생산액	100	소매 상품 류통액 총계	100
그 중 사회주의 경제 형태	90.7	그 중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	56.5
소상품 경제 형태	1.5	개인 상업	43.5
자본주의 경제 형태	7.8		

국가 생산품의 조직시장 유일판매정책과 생산협동조합의 성장으로 인해 1949년 국가상업망의 점유율은 56.5%까지 성장하였다. 그러나 개인상인들은 행상, 벽지 방문판매, 지역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창출, 상업 간부의 관료주의와 부패 등을[33] 통해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며 43.5%라는 숫자는 여전히 북한정부의 부담으로 남아있었다.

2) 한국전쟁기 국가상업망 복구와 개인상인의 반등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로 북한정부가 구축했던 국영상업・소비조합 상업망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미군의 폭격은 38선 이북의 산업전반은 물론 교

31) 남춘화, 앞의 글, 104면.
32) 같은 글, 106면 표 재구성.
33) 김재웅, 앞의 글, 2010, 226-232면.

통망을 비롯한 유통망을 파괴시켰고, 대규모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인적 기반조차 무너뜨렸다. 도시와 농촌의 인민은 疏開되어 소비형태도 변화하였다.[34] 소비조합은 전시체제로 전환되었고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었다.[35]

① 주민의 소개로 인한 구매력의 지역적 변동에 적응하게 상업망들을 재배치하며 전시의 특수한 조건에 적응하게 상업 조직 및 방법을 변경하며:
② 소비품에 대한 후방 인민과 군대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식물, 소비품의 생산을 조직 확대하며 수매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③ 체계의 모든 고리들에서 기구 및 사무를 결정적으로 간소화하며 엄격한 절약제도를 실시하며 제도와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것 등등.

이와 함께 축소된 상품과(상품폰드[36]) 수송능력의 제한성 극복이 요구되었다. 1949년 국가상업망의 유통액 점유율이 56.5%까지 올라갔었지만 전쟁 개시 후 6개월 만에 소비조합 상점 1,381개소, 리용 생산 기업소 587개소가 파괴되었고 전쟁 기간에 소비조합 상업체계의 손실은 약 15억 원에(구화폐) 달했다.[37] 또한 UN군의 북진으로 기존의 상업망은 유명무실해졌으며 이에 따라 개인상인들의 상업 활동은 확장되어 원자재 및 상품구매 경로와 판로가 다양해져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전쟁 시기 개인상인들의 상업 활동은 오히려 38선 이북지역 상품유통을 가능하게 하여 북한정부에게도 부정적인 요소로만 작용하지 않기도 했다.

1951년 1월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전선이 남하하면서 북한정부는 상업망을 복구하기 시작했는데[38] 우선적으로 인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1951년 3월 22일 내각결정 제233호「전시하 인민 생활 안

34) 조룡식,「우리나라 상업의 발전」,『우리나라의 인민경제발전』, 국립출판사, 1958, 244면; 최중극,『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전시경제(1950-1953)』, 사회과학출판사, 1992, 175면.
35) 김원삼, 앞의 책, 33면.
36) 엄재언 편, 앞의 책, 52면. "상품폰드라는 것은 공업 및 농업 생산물 중에서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을 통하여 인민 소비에 제공되는 그 부분을 말한다. 상품 폰드는 소매 상품 류통의 전개와 인민 소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질적 기초로 된다."
37) 김원삼, 앞의 책, 34면.
38)「상품은 늘어가고 물가는 내려간다 국가상업망 벌써 70%이상 재건』,『로동신문』, 1951.3.22.

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증산과 상품 류통에 관하여」[39]를 통해 생필품 생산의 증대와 상품유통관계 개선 조치를 강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납 현물세 및 대여곡 상환 면제, 일부 세금 감면, 전재민 구호조치, 식량을 포함한 배급제도 강화 등을 통해 사회안정을 도모했다.[40] 1951년 국가상업망의 유통액 점유율이 48.2%[41]까지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1951년 1월 이후 빠르게 상업망을 복구했다고 볼 수 있다.

전시 상업망 복구는 戰前 국영기업과 소비조합을 정부에서 일괄 관리했던 체계에서 각 지방별로 그 책임을 분배하면서 실행됐다.[42] 이는 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의 용이성과 가공체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상품생산의 촉진을 유도하는 조치였다. 이에 따라 道營경공업 공장, 기업소, 각 지역에 생산협동조합을 창설키로 했다.[43] 전후 붕괴된 국가상업망에서 '모리간상배'적 상업활동을 전개했던 개인상인들은 사회주의 상업망에서 입수한 공업 상품을 국정 소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농촌주민들에 판매했고, 양곡유통에 깊게 개입하여 농촌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창출했다. 북한정부는 현실적인 제약에 의해 전체 유통망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기능을 세분화하여 지방산업을 강화시켜 각 지역별 생산·소비구조의 자급자족 형태를 창출하고자 했다. 전쟁 기간 상품유통총액을 1949년과 대비하면 1951년에 29%, 1953년에는 64%까지 도달했다.[44]

그러나 전쟁 시기 기존 상인들의 월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이동으로 농민·노동자가 상인이 되어 그 자리를 메워 국가상업망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없었다.[45] 주로 개인상인들이 상품을 유통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가상업망이 복구되었다고 할지라도 전쟁 이전의 수준이라고 보기 어

39) 「전시하 인민생활안정을위한 생활필수품 증산과 상품류통 강화에 관하여 내각에게 결정 채택」, 『로동신문』, 1951.3.27.
40) 최중극, 앞의 책, 175면.
41) 조수룡, 앞의 글, 355면 〈표 2〉 참조.
42) 최중극, 앞의 책, 176면.
43) 같은 책.
44) 같은 책, 177면.
45) 리상선, 앞의 글, 1956, 40면.

려웠다. 또한 북한정부의 정책과 이반된 소비조합의 운영형태는 상업정책의 토대를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고 갔다.

> 소비 협동 조합은 자기 기본 임무로 되고 있는 농촌에서의 상품 류통과 농산물 수매 사업 그리고 농촌 지대에서의 상업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도시 및 도시 주변에서 《매상고 본위》로 사업하는 경향을 발로시키고 있었다. 1952년 6월 말 현재는 소비 협동 조합 상업망의 70%가 농촌에 있었고 전시의 특수한 조건과도 관련하여 기본적 소비 대중들이 농촌 지대에 집중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대에서의 상품 류통액은 소비 협동 도합 상업총 류통의 약 51%에 불과하였다.[46]

〈표 3〉 소비 협동 조합 상업 기업소 복구 정형(단위: 개수)[47]

구분 \ 년도	1950	1952	1953
상업망 계	510	1,237	2,105
그 중 소매상업망	411	949	1,790
사회급양망	120	288	315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소비조합의 구성원들이 인민생활의 개선에 힘쓰기보다 정해진 목표 달성에 따른 행정에 주력했고, 상품 판매가 용이한 도시와 도시주변에서 사업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소비조합원, 상업일꾼들의 '매상고 본위' 풍토는 개인상인들과의 경쟁하기보다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위의 표와 같이 1953년 소비조합상점이 약 4배 이상 급격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상인들은 각 공장 및 생산협동조합으로부터 각종 공산품을 매입하여 지역 간 가격차, 도농의 가격차를 이용해 소비조합이 미치지 못한 농촌에서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화폐 또는 양곡으로 대신 대금을 받아 도시에서 되파는 방식으로 높은 이윤을 남겼다. 이에 따라 1953년 2월 28일 부 내각결정으로 국가상업은 도시 및 노동자지구에서 소비협동조합상업은 농촌에서 활동할 것을 규정했다.[48] 이로써 국가가

46) 과학원 경제 법학 연구소, 『해방후 우리나라의 인민 경제 발전(8·15 해방 15주년 기념)』, 과학원출판사, 1960, 94면.
47) 김원삼, 『우리나라에서 협동 단체 상업의 발전』, 과학원출판사, 1962, 36면 표.

직접 운영하는 국영상점은 도시와 노동자지구에서, 상업성 하부 조직인 소비조합은 농촌에서 운영하게 되어 상호간의 이동이 금지되었다.

전쟁 시기 개인상인들과 경쟁 속에서도 꾸준히 국가상업망이 복구되어 전 소매상품 유통액 및 비율은 1952년 48.8%, 1953년 52.7%로 성장하여 1949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49] 파악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상인들의 월남과 북한정부의 상업정책의 실시에 따라 전쟁 이전 상업망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개인상인들의 상품유통액 비율이 50% 내외를 상회했다는 사실은 '사회주의 상업'정책의 실패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정부는 전후복구과정에서 민간상업 억제정책의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국영상업·소비조합의 사업방식의 개선과 봉사성[50]을 제고하여 개인상인들과의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3. 전후 사회주의 상업체제 강화와 '옥심상점'

1) 민간상업 억제정책과 개인상인의 대응

해방 직후-1953년 동안 개인상인들은 전체 상업유통망의 50% 내외를 선회하고 있었고, 국영상업과 소비조합 사업이 부진했던 농촌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전개하여 비교적 손쉬운 이윤을 얻고 있어 이들을 국가상업망으로 편입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인해 붕괴된 국가상업망은 개인상인들에게 상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또한 전쟁 시기 인민생활안정을 위해 북한정부는 개인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묵과하고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쟁으로 인해 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월남했다고는 하나 생계를 위해 상업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 자리

48) 과학원 경제 법학 연구소, 앞의 책, 95면.
49) 조수룡, 앞의 글, 357면.
50) "상업에서 봉사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상점, 식당들이 언제든지 인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품절시킴이 없이 정확하게 공급 보장하며, 특히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는 질 좋고 값 싼 상품을 그들에게 가장 편의한 방법으로, 그리고 친절하고 문화 위생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상선, 앞의 책, 1959, 61면; 엄재언 편, 앞의 책, 205면.

를 메우면서 그 비율은 여전히 일정하게 유지 되고 있었다.[51]

1953년 분기별 개인상점 수는 1/4분기 32,400, 2/4분기 31,600, 3/4분기 35,100, 4/4분기 40,700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4만여 개의 개인상점 중 52.8%는 농촌에, 47.2%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고, 종목별로는 고정상점이 22,200, 음식점・여관업 6,400, 행상 12,100으로 나타났다. 시장 현황은 상설시장이 82, 정기시장이 432로 총 514개의 시장이 있었다.[52] 북한정부는 비조직시장인 개인상인들의 상업망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 상업'의 부정적 요소로 인식하여 '모리간상배'적 상행위와 사자본 축적을 경계하고 있었다.

북한정부는 1953년 1월 10일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영세상인 기타에 대한 세액은 저하시켜 유통망을 확장시키고 투기업에 의하여 전시에 이윤을 얻는 개인상인에 대해 세율을 높게 부과"하여 개인상인의 투기적 상업 활동을 억제시켰다. 1954년 1월 15일 내각결정 제5호 「상업 류통 부문 사업 개선 강화 대책에 관하여」를[53] 공포하여 개인상인에 대한 상업 행정적 관리조치를 강화했다. 뒤이어 1954년 4월 국가상업의 관리 기능을 각 도 인민 위원회에 이관함으로써 지방상업을 창설하였다.[54] 북한정부는 1954년에 접어들면서 개인상업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개인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감시하고, 지방상업을 창설하여 그 기능을 분산시켜 좀 더 작은 단위에서 개인상인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상업원천 자체를 지방단위에서 차단하여 소비조합과 국영상업기관의 수매율을 높이고자 했다.

---

51) 리상선, 앞의 글, 1956, 40면. "공화국 북반부의 현존 개인 상공업자들 중에는 원래에 근로자적 성분을 가진 계층들이 적지않게 포함되여 있다. (…) 불완전 하나마 평양시의 745명의 상공업자들을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면 그들의 성분 구성에 있어서 해방전의 로동자, 사무원, 농민들이 45%를 차지하며 일제 시대로부터 상공업에 종사하여 온 자는 겨우 8%에 불과하며 그 나머지는 수공업자, 자유 직업자로 되어 있다."

52) 전용식, 앞의 글, 195면.

53) 같은 글, 196-197면. "상업성은 개인 상업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시정하고 상업 행정 사업을 강화할 것인 바, 현재 재정 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업 등록 제도는 해당 구역 상업 부서의 합의에 의해서만 실행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업 행정 기관인 지방 상업부는 개인 상업 등록을 합의함에 있어서와 시장 상업 관리에 있어서와 시장 상업 관리에 있어서 영업 장소의 위치, 위생 조건, 매매 상품등 제 조건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54) 리상선, 앞의 책, 1959, 22면.

그러나 개인상공업자들은 전쟁 시기 생산협동조합과 소비조합에 가입하고 실제로는 개인상업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상업망 내부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었고 심지어 지도부로 활동하기도 했다.[55] 개인상공업자들의 사업방식은 첫째, 생산협동조합 또는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품목을 생산 또는 매입하여 판매하고, 둘째, 국가상업망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 불량품을 매입하여 재생·가공하여 판매하고, 셋째, 국가상업망이 미치지 못한 곳에 방문하여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여 이윤을 얻고 있었다.[56] 그들의 성공요인은 정부가 생산하는 상품의 조악성과 국영상업·소비조합 일꾼들의 「매상고본위」적 사업풍토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만성적 생필품 부족현상과 양곡부족은 가격 유동성을 촉진시켰고 개인상공업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개인상공업자들의 활발한 상업 활동은 결과적으로 자본 회수율의 저하로 이어져 북한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북한정부의 경제정책은 1954년 중반까지도 전시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인민민주주의 경제체제로 회복시키는 데 있었다. 1954년 하반기 정부의 3개년 계획의 수정에 의해 농업협동화가 예정보다 앞당겨 시작되었고 상업 분야에서도 급진적 정책이 채택되어 10월 15일 내각결정 제130호 「개인 량곡상을 금지할 데 관하여」가 채택되었다.[57] 개인상인들의 곡물거래를 제한하고 정부의 수매사업을 촉진시켜 도농간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안정성과 개인상인들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했다. 이 결정으로 개인상인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1955년 봄 자연재해에 의한 양곡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영세상인들의 몰락이 대부분일 수 있으며 농민들은 양곡을 비축하거나 정부의 수매에 응하기보다 부유한 개인상인들에게 양곡을 판매하여 수입을 올렸을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개인상인의 수가 감소하는 중요한 변수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농촌에서 양곡을 이용한 상업 활동으로 부유한 개인상인층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다.

---

55) 國史編纂委員會 編, 「협동단체들의 사업 개선대책에 관하여」(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결정서, 1953년 9월 23일)」, 『북한관계사료집』 30, 國史編纂委員會, 1998, 481-489면.
56) 조성직, 앞의 글, 866면.
57) 조수룡, 앞의 글, 363-365면.

1954년 「민영사업허가제 실시에 관한 규정」(상업성령 제4호, 1954년 9월 13일)을 폐지하고 1955년 9월 「개인상공업 허가에 관한 규정」을 실시하여 개인상공업자들의 생산·판매업종을 제한하였다. 주목할 점은 지방원료의 원천을 이용하는 일용 필수품에 생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나머지 '장려할 기업의 업종'은 가구, 석조제품, 문방구 등의 품목이었고 식품류는 금지되었다. 특히, 소금, 술, 연초, 인삼, 양곡 등의 판매를 금지하여 식품류와 필수품목에 판매를 금지시켜 정부가 독점하는 정책을 실시했다.[58] 이로써 고정상점 개인상인들은 정부의 허가와 관리·감독 하에 놓여 크게 위축 될 수밖에 없었다.

〈표 4〉 소매 상품 류통의 소유 형태 별 구성(%)[59]

년도 / 소유형태	1949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소매상품유통총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가상업(%)	27.9	32.0	39.1	50.6	53.9	48.8	69.2
협동단체상업(%)	28.6	35.5	32.8	34.0	33.4	39.1	30.7
개인상업(%)	43.5	32.5	28.1	15.4	12.7	12.1	0.1

위의 표는 협동단체의 비율이 과장되어 있지만 1954-1955년간 개인상업의 하락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협동단체의 비율이 과장된 것은 개인상인들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농산물 상점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협동단체상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60]

1955년 이후 농업협동화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농업생산성이 증가하고 농촌에 구매폰드가 성장하자 인민의 소비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54년 이후 위축된 개인상인들의 자리를 소비조합과 국영상점이 대체하면서 국가상업망의 확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955년 지방상업기관으로부터 도매상업 기능을 분리해 상업성으로 이관하고, 1956년 초 전국 단위에서 소비협동조합의 결함을 시정하는 조직개편사업을 실시했으며[61]

58) 정경모, 앞의 책, 1839-1841면.
59) 조수룡, 앞의 글, 355면의 소련 측 자료 〈표 2〉와 비교하여 민간상업 부분과 협동조합 부분이 과장되어 있지만 1954-1955년간 개인상업의 쇠퇴는 뚜렷하다. 김원삼, 앞의 책, 56면.
60) 1957년까지도 165개의 위탁상점이 운영되고 있었다. 김원삼, 앞의 책, 52면.

생산기관들의 직매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조직시장의 보충적 역할을 부여했다. 조직시장이 확장되자 비조직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었고 정부는 상업기능을 점차 확대하여 농촌의 구매폰드 성장을 정부 재정으로 인입시켜 상업을 통한 재정을 확충하려 했다.

1956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상업부문의 결함은 상품 원천(원자재)의 부족보다 상품 공급과 수매 사업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57년 1월 24일 조선로동당 상무위원회 결정 「상품 류통 및 수매 사업 개선을 강화할 데 관하여」에 기반하여 1957년 2월 22일 내각결정 제17호 「상품 류통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가 채택되었다.[62] 이에 따라 수매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1957년 10월 도매상업체계를 개편하여 유일도매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배정 상품에 대한 도매상업은 상업성이, 자체 수매 농산물에 대한 도매 상업은 소비조합에서 담당하게 되었다.[63]

1957년 2월 13일 「전국 상업 일'군 열성자 회의」가 평양에서 열리면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생산과 소비관계에서 도농간의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업협동조합의 성장과 함께 계획적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 위에서 국영상점, 소비조합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지였다. 또한 개인상공업자들의 투기적 상업을 배척하고 국가의 계획적 상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상업은 근로자를 착취하는 도구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을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64]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우수성과 상업일꾼들의 봉사성을 언급하면서 국가상업의 확대를 강조했다.

1957년 말이 되면 농업협동화의 완료시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상인의 상품원천은 전국적 단위에서 차단되고 있었다. 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된 농산물, 공예작물 등은 정부가 장악하기 쉬워졌으며 농민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수매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정부는 양곡에 대해

61) 리상선, 앞의 책, 1959, 22면.
62) 조룡식, 앞의 글, 253-254면.
63) 같은 글.
64) 「전국 상업 일'군 열성자 회의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로동신문』, 1957.2.13.

국가 유일수매·유일판매를 실시하여 기왕의 부농들이 개인상인에게 판매했던 양곡을 차단함으로써 개인상인들의 자본축적을 근본적으로 봉쇄시켰다. 더하여, 1958년 1월 1일부로 양곡을 제외한 일체 소비품에 대해 배급제를 폐지하고 유일국정소매가격 판매를 실시해 상품 부족현상이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도시 내 개인상인들은 이윤을 획득하기 어려워졌다. 개인상인들은 상품원천이 차단되고 정부의 유일국정소매가격의 시행으로 기존의 상업 활동을 연속하기 어려워졌으며, 195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작된 개조정책에 의해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폐업 이후 국가기관의 노동자, 사무원, 생산협동조합원, 농업협동조합원 등의 '노동자'·'근로자'로 전환되었다.[65]

결국 공식적으로 1958년 8월 개인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극소수의 상인들은 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으며[66] 국가상업망은 산간벽지를 비롯한 농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개인상인의 존재는 국영상업·소비조합 사업의 부진과 낮은 봉사성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했다.[67] 북한정부는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과정에서 개인상인들과 투쟁에서 인민의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상인들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국영상업·소비조합의 개선과 상업 일꾼들을 봉사성 높은 '사회주의적 상업 노동자'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다.

2) 국가상업 개선정책과 '옥심상점'

1955년 9월 「개인상공업 허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된 직후인 10월 5일 『로동신문』을 통해 평안남도 안주군 소비조합 '룡연상점'의 판매원 김옥심이 소개

65) 1956년 현재 개인상인의 폐업 이후의 통계이긴 하나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생각된다. 리상선, 앞의 글, 1956, 42면.
66) 같은 글, 372면.
67) 「상업기관에서 제도와 질서를 어떻게 확립하였는가」, 『로동신문』, 1956.4.6; 「개인 상업에 대한 당의 정책이 왜 관철되지 않고 있는가—사리원시 인민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1957.10.3; 「상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자—황해남도 상업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로동신문』, 1957.10.17; 「상품의 배정과 공급에서 심중한 결함이 있다」, 『로동신문』, 1957.12.20; 「소비 협동 단체 상업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 『로동신문』, 1958.6.15 등.

되었다.[68] 이 시기 김옥심은 수많은 상업부문 모범 사례의 한 명에 불과했으나 꾸준한 모범적 상업 사업방식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는 1957년 전국 각지에서 온 상업일꾼들의 견학장소가[69] 된 '룡연상점'의 점장으로 승진, 1958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상업부문의 토론을 맡으면서 전국적으로 모범적 상점, 상업일꾼으로 인정받았다. 1958년 8월에는 김일성의 부름을 받아 평양 중앙 제1백화점 지배인으로 일하기 시작해 국영상업 부문에서 주목받는 상업일꾼으로 성장했다. 김옥심의 '옥심상점'[70] 사업방식을 통해 1953-1958년간 북한정부의 국영상업・소비조합 정책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영상업과 민간상업이 경쟁하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1958년 8월 이후 개인상인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회주의 국영상업의 목표였다.

김옥심은 1953년 11월 평안남도 안주군 룡연리 농촌 소비조합 상점 판매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룡연상점'은 농촌 소비조합으로 작고 영세한 상점이었으며 판매실적은 여느 상점과 비교하여 충분치 않고 구비해 놓은 상품도 넉넉지 못한 상점이었다.[71] 또한 상품 진열과 보관, 재고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물건에 먼지가 쌓이고 손상을 입기 쉬운 상태였다. 김옥심은 첫 출근 이후 상점 관리체계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하여 수첩에 기록하고 재고를 꼼꼼히 관리하여 다른 판매원과 다르게 부족분이 없는 상태를 유지했다.[72] 당시 많은 농촌 소비조합에서는 낭비현상이 심각했고 판매원의 태업과 낮은 봉사성은 만성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들은 개인상인과 달리 '상업 노동자'였고 따라서 상품판매와 관계없이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낮은 봉사성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국가

68) 「국가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평남 안주군 소비조합 룡연 상점 판매원 김옥심 동무, 함북도 로동 물자 공급 관리소 신양 상점 점장 홍영배 동무, 강원도 고산군 수매소 하조 운반공 김삼준 동무)」, 『로동신문』, 1955.10.5.

69) 「나는 작년에 이렇게 일하였습니다」, 『상업신문』, 1958.1.10.

70) 김옥심은 1955년 점장으로 승진한 이후 '룡연상점'을 주민들은 '옥심상점'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김태경, 앞의 글, 5면.

71) 같은 글, 2면.

72) 오성,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기쁨과 영예—김 옥심 동무의 사업 경험에서—」, 『상업』 제6호, 민주상업사, 1958.8, 31면.

상업망의 낭비·탐오현상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본의 선순환구조의 문제였고, 계획경제 운영의 구조에서 반드시 제거해야할 부분이었다.

후복구사업에서 상업망 복구과정의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상품폰드와 구매폰드의 교환과정이 계획경제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했으며, 국영상업·소비조합은 인민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양 폰드의 균형적 교환형태구조를 완료해야 했다.

김옥심의 상업방식은 국가 상업망 확장과 봉사성 제고를 직접 실행하면서 농민들의 구매폰드를 국영상업망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소비조합에 없는 삼각자를 구매하러 온 학생에게 삼각자를 구해주면서 주민의 수요를 계층별로 연구하여 사전에 상품을 준비하고자 했고, 다른 판매원이 한 사람에게 '부용담배'를 전량 판매하여 품절되어 버린 이후 이 담배를 구매하러 온 노인에게 향후 입고되었을 때 직접 집으로 가져다주기까지 했다.[74]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소비조합에서 인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 주었다. 그 개선방법과 이후 사업방식은 농촌 소비조합의 상업 활동의 촉진에 목표를 두고 개인상인과의 경쟁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특히, '부용담배'와 관한 경험은 '사회주의 상업'이 '자본주의 상업'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해설이기도 했다. 「매상고 본위」의 판매원이 특정인에게 전량 판매하여 품절되어 버린 사실은 자본주의 상업의 맹목적 이윤추구로 비판받을 수 있었으나, 김옥심의 판매경험은 '사회주의 상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복지와 균형적 '분배'에 방점을 두었다는 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사진〉 김옥심의 상품판매 모습(1958)[73]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한 김 옥심 동무.

73) 김태경, 앞의 글, 김옥심 사진.
74) 오성, 앞의 글, 32면.

1954년 이후 농업협동화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농민들은 점차 '농업노동자'화 되었다. 이는 일정한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노동자의 형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생활과 형태가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급자족했던 물품의 생산시간과 노동에 따른 여가시간의 제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여, 가내수공업으로 충족했던 부분들은 상업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1955년 김옥심은 농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동판매를 시작했고 생활필수품 생산, 식료품 가공 등을 통해 농민들을 충족시키면서 '룡연상점'은 '옥심상점'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농업협동조합원들은 "입는 것, 먹는 것을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상점에서 값싸게 만들어주니 정말 고마운 세상이다."라고 칭찬했다.[75]

또한 이미 「상업 모범 일꾼」으로 선정된 김옥심은[76] 개인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순회이동판매, 집단판매, 현물교역, 소포판매, 주문배달판매를 실시하여 농민들을 찾아가고 편의성을 높여 판매고를 높였다. 이동판매 시 현금이 부족한 조합원과 후방가족에게는 부업을 소개하거나 고자재를 수매하여 상품을 공급하였다. 지역의 학교와 농업협동농장을 방문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고 필요한 물품의 주문을 받아 소비조합상점에서 직접 상품을 생산하거나 구매하여 공급하였다.[77]

특히, 농업협동조합에는 장날 2일 전에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주문 받은 후 상점에 비치하여 개인상인들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소비조합 사업에서는 봉사성을 제고하여 모범적 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78] 소비조합 판로의 다양화는 증산의 최전선에 있는 농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여 증산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가상업망 안에 대부분의 소비를 인입시켜 사회

75) 김태경, 앞의 글, 4-6면.
76) 「국가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평남 안주군 소비 조합 상점 판매원 김옥심 동무」, 『로동신문』, 1955.10.5; 「상품 류통 부문의 모범 일'군들—안주군 룡연 상점 판매원 김 옥심 동무」, 『로동신문』, 1957.4.10.
77) 김태경, 앞의 글, 7면; 오성, 앞의 글, 34면.
78) 북한정부는 "1957년 9월부터 새로운 상업방법인 월부판매, 소포판매 및 배달판매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조룡식, 앞의 글, 256면; 「국가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평남 안주군 소비 조합 상점 판매원 김옥심 동무」, 『로동신문』, 1955.10.5.

주의 재생산 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김옥심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영상점과 소비조합의 문제는 부족한 상품, 불친절, 불청결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루었으며 상업일꾼들의 부패, 만성적인 「매상고 본위」, 상업을 천시하는 인식, '자본주의적 상업'에 있었다.

1956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으로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이 강조되었다. 김옥심은 상품의 입하와 관리, 자체수매사업을 개선하고 상품에 대한 보관에 힘을 쏟아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하였다. 수매사업의 선전과 자체수매사업의 강조는 여전히 농민들이 비조직시장에서 거래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또한 내부원천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재활용 자재 절약으로 1956년 상반기 50%의 감모율(減耗率)을 기록할 수 있었다.[79] 김옥심은 정부의 상업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범적 상업일꾼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1957년 2월 「전국 상업 일'군 열성자 회의」에서 "국영 및 협동단체상업의 급속한 발전과 그 역할을 일층 높이므로서 상품류통사업을 개선 강화시키기 위하여"가 발기된 이후 1957년 3월 6일 내각결정 제17호 「국영 및 협동단체상업의 급속한 발전과 그 역할을 일층 높임으로써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을 향상시키며 국가 축적을 증대하기 위해 상품류통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80]를 결정하였다. 북한정부는 국영상업과 협동단체 상업기관에 상업망 확대와 식품류의 재고 보장 및 위탁판매를 통한 상업망의 확장, 봉사성 제고, 생산협동조합 조직 강화를 주문하였다. 특히, 기업소 내의 정당·사회단체 책임자들이 생활향상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게 하여 당의 지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1957년 4월부터 주간 신문 『상업』(이후 『상업신문』) 발행을 결정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상업' 사업방식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 결정에 의해 1957년 상반기 종합상점 94, 공업품상점 21, 식료품상점 131, 양곡배급소 170, 식당 28개소 총 444개소가 증설되어[81] 전국적으로 국가상업망을 확장시키고 개선 조치를 취했다.

---

79) 사과가 변질될 우려가 있으면 쨈으로 만들고, 생선은 제 때 염장하여 공급하고, 과자 찹쌀 대신 과자 부스러기는 고추장을 만드는데 이용하였다. 김태경, 앞의 글, 10-12면.
80) 김원삼, 「로동자 지구에서의 상업 개선을 위하여」, 『상업』 제4호, 민주상업사, 1957.5, 4-5면.
81) 같은 글, 5면.

그러나 국영상업과 소비조합은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북한정부의 국영상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조는 농촌 소비조합의 수매, 농민들의 현물세와 잉여농산물이 국영상점으로 공급되어야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구조적인 장점을 갖고 있었으나 상품 공급의 불안정성과 다양성에서 개인상공업자들과의 판매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다.[82] 농촌 소비조합은 그 상태가 더욱 심각했는데 소비조합 간부들의 태만과 부패, 만성적 「매상고 본위」적 태도로 인해 농민들은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매할 수 없었다.[83]

이에 비해 개인상인들은 전통적 자본축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촌의 부농들과 결합하면서 자본 안정성을 구축하고 이들로부터 잉여농산물을 구입한 이후 도시에서 화폐로 전환했다. 이를 기반으로 농촌에 필요한 물품 즉, 생필품 및 공산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면서 부농과의 공고한 결속을 바탕으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84]

각 지방 인민위원회와 소비조합은 기관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결함이 있었는데 특히 수매과정에서 드러났다. 사리원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정태성, 상업부장 김인호는 지방상업으로 이관된 상업구조에 따라 소비조합과 밀접한 관계였다. 그런데 이들은 시장관리소장 전기렬에게 접대를 받으며 불법 개인상공업자들을 용인해 주었다.[85] 이에 따라 시장은 국가통제에서 벗어난 '자본주의'적 형태의 시장을 일부 운영하면서 부농의 잉여농산물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또한 소비조합에서는 수매문제가 붉어졌는데, 원칙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에 직매 또는 예약수매제를 통해 수매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개인상인에게 물품을 구입하여 상점에 배치하는 행태를 보였다.[86] 수매원이 비싸게 물건을 사거나 횡령 또는 계절에

82) 「상품의 배정과 공급에서 심중한 결함이 있다」, 『로동신문』, 1957.12.20.
83) 「상업기관에서 제도와 질서를 어떻게 확립하였는가」, 『로동신문』, 1956.4.6.
84) 「개인 상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하자!」, 『로동신문』, 1957.10.1.
85) 「개인 상업에 대한 당의 정책이 왜 관철되지 않고 있는가—사리원시 인민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1957.10.3.
86) 「상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자—황해남도 상업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로동신문』, 1957.10.17.

맞지 않는 물건을 사들여 상점에 배치해 소비조합 사업은 개인상인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정부는 국가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비판하고 김옥심과 같은 모범 일꾼을 통해 모범적 상업 방법을 선전하고자[87]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었다.

1957년 10월 북한정부는 도매상업체계를 개편하여 각 상업 기관별로 분산 되어 있는 도매체계를 유일도매체계로 전환시키고 국가 배정 상품에 대한 도매상업은 대내외 상업성이 담당하고 자체 수매 농산물에 대한 도매상업은 소비협동조합이 각각 담당하는 도매상업체계로 개편되었다.[88]

〈표 4〉에 의하면 협동조합단체의 유통규모는 1953-1957년 등락폭이 적은 데 비해 국영상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옥심상점' 같은 농촌 소비조합상점은 정부의 적극적인 선전과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의 소비조합상점을 비롯하여 국영상업망에 종사하는 '상업 노동자'들의 인식 개선과 사업방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북한정부는 1958년 소매상업체계도 개편하여 도시 및 노동자 지구를 비롯한 모든 소매망을 종합상점체계로 개편하여 개별 국가상업망의 영세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농촌에서는 농업협동화가 완료됨에 따라 소비협동조합 상업망들을 농업협동조합에 이관하고 한 개의 농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독립채산제 상점들로 조직했다. 또한 국가상업망을 확장하기 위해 각 생산기관과 농업협동조합의 직매상업망을 마련하여 도시와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였다.[89]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상업'의 목표 중 하나인 도농간의 경제적·합리적 연계를 촉진하고자 했다.

1958년 소비조합의 농업협동조합으로의 이관은 양곡수매사업의 사실상의

87) "1957년 이른 봄[4월 이후로 추정: 필자] 옥심 동무는 조선 소비 조합 제3차 대회에 참가하여 영예에 빛나는 공로 메달을 수여 받았으며 중앙 련맹 리사회 성원으로 선출됨. 룡연 상점 점장으로 된 그는 뒤이어 당원된 영예를 지니었다. 그의 심장은 당 상업 정책 관철에 모든 것을 이바지할 굳은 결의"를 했다. 오성, 앞의 글, 32면.

88) 조룡식, 앞의 글, 254면.

89) 직매상업망은 각 생산기관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생산주체가 도시에 직매상점을 마련하여 중간 유통비를 절약하고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를 말한다.[필자주] 리상선, 앞의 책, 1959, 32면.

실패를[90] 의미했으며 국영상업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정부가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상업체계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소비조합이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면서 공식적으로 농업협동조합원들은 생산-소비를 동일한 공간에서 하게 됨으로써 공동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가운데 비조직시장에서의 거래는 조합과 개인 모두의 손실로 직결되었다. 북한정부는 개인상인들을 통제하면서 시장의 공간형성과 소비품의 공급처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소비처를 축소시켜 기왕의 비조직시장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단절시켰다.

북한정부의 상업정책이 점차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가운데 모범적 '상업 노동자'의 보상정책은 전국적으로 선전되고 있었다. 모범 '상업 노동자'들은 선진 상업 즉, '사회주의 상업'이 실시되고 있는 소련을 방문하여 상업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북한에 실시함으로써 구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정부는 기층의 '상업 노동자'들에게 중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김옥심은 북한정부로부터 소련 방문의 기회를 얻어 1958년 4월 29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5.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소련의 상업을 견학하고 왔다.[91] 1958년 6월 김옥심은 김일성의 부름을 받아 전원회의 상업부문 토론자가 되었다.[92] 김일성은 김옥심에게 "옥심 동무는 누구보다도 사업을 잘 했소, 동무는 사회주의 상업의 원칙을 잘 알고 있소, 내 동무네 상점에 한 번 가보겠소. 꼭 가 보겠소."라고 말한 뒤 1958년 6월 21일 '룡연상점'을 방문하였다. 김일성은 상점의 청결함을 칭찬하고 자체생산품에 대해 조언을 건냈다.[93] 김옥심은 1958년 전원회의 토론자로 나서 모범 상업일꾼으로 인정받았으며 김일성의 방문으로 상업 부문의 모범으로 선전 되었으며 1958년 8월

90) 북한정부는 "1958년 11월 수매량정성을 설치하여 국가유일수매체계를 확립하고 종전에 지방경리성이 수행하던 량곡 및 고공품 수매와 경공업성이 직접 담당했던 육류 및 공예작물의 수매와 소비협동조합이 담당했던 농부산물의 수매사업을 이에 집중시키게 하였다." 같은 책, 32-33면.

91) 「쏘련을 방문하고서(소비 협동 조합 평남도 안주군 련맹 룡연 상점 책임자 김옥심)」, 『상업신문』, 1958.6.24.

92) 김옥심,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맡은 어머니가 되어야 하오」, 『상업』 제4호, 민주상업사, 1963, 12면.

93) 같은 글, 13면.

개인상공업협동화가 완료된 이후 김옥심은 평양 중앙 제1백화점 지배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룡연상점'의 사업방식은 북한정부가 추진했던 상업정책의 일부였고, 개인상인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했다. 김옥심의 사업방식은 정부의 정책을 앞서고 있었는데 다양한 형태의 판로 확장과 봉사성은 개인상인들의 이윤추구 방법의 하나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국영상업과 개인상인들과의 경쟁은 개인상인들의 사업방식을 모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었으며 북한정부도 이를 이용하여 국영상업의 개선책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맺음말

해방 이후 북한정부의 상업정책은 국영상업·소비조합과 개인상공업자들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이루어졌다. 1945년 이후 줄곧 압도적인 민간상업경제구조를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정부(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상업망을 확립하고 자본주의적 상업요소를 제거하여 '사회주의 상업'을 실시 하고자 했다.

북한정부의 상업정책 속에서 개인상공업자들은 억압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상품유통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이용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모리간상배'적 인식이 개인상공업자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상업기술과 상업망은 조직시장의 보충적 요소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 직후 개인상인들을 압박하면서 빠르게 구축했던 국가상업망은 한국전쟁으로 붕괴되었다. 이 시기 많은 상인들의 월남했지만 새로운 계급이 생계유지를 위한 상업활동을 전개하면서 개인상인들의 비중은 전쟁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히려 전쟁 시기 정부의 국가상업망 확충은 개인상인들에게 호재로 작용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했고 역설적이게도 개인상인들의 상업활동으로 인해 정부는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상품유통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후복구 속도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상업부문에서도 개선책을 제시하여 개인상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상품유통과 소매가격 안정책을 취했다. 1954년 양곡거래금지 조치는 전쟁을 거치면서 양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가격의 급등과 지역 간 가격차로 인한 개인상인들의 시장 혼란을 개선하고 그들의 자본축적 도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로 많은 개인상인들은 폐업 수순에 들어가 그 수는 급감하였다. 1956년 12월 전원회의 이후 1957년 북한정부의 양곡에 대한 유일수매·유일판매 조치에 따라 개인상인들은 더욱 위축되었으며 농업협동화가 완료되어 가자 농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원천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기 시작하여 상업 활동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다.

북한정부는 한편으로는 개인상인을 압박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상업망을 확장하고 국영상업·소비조합사업의 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1955년에 등장한 김옥심은 전쟁 직후 상업망에 인입된 상업일꾼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전국적인 모범 상업일꾼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옥심의 사업방식은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개인상인들의 사업방식을 모방하고 발전시키면서 농업협동화 이후 성장한 농민들의 소비규모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농민들의 소비처를 비조직시장에서 조직시장으로 끌어들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재생산구조의 확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기도 했다.

1958년 8월 개인상공업 협동화가 완료되면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상업은 국가상업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국영상업과 민간상업 간의 경쟁이었다. 정부는 민간상업을 억제하는 동시에 그들의 상업망과 상업기술을 이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회주의 개조정책을 실행 시켰다. 김옥심은 정부의 억압정책과 개인상인들과의 경쟁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상업정책의 모범이 되었고 이는 1950년대 북한 상업일꾼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모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50년대 북한정부의 상업정책은 계획경제를 위한 사회주의 재생산구조 확립에 방점을 두면서 인민의 증산을 위한 하나의 기재였다.

▮ 참고문헌

『근로자』, 『로동신문』, 『북한관계사료집』, 『상업』, 『상업신문』.

김원삼, 『우리나라에서 협동 단체 상업의 발전』, 과학원출판사, 1962.
김태경, 「상업부문 문화 봉사성 제고에서 얻은 김 옥심 동무의 몇 가지 경험」, 『집단적 혁신을 위하여』, 직업 동맹 출판사, 1958.
남춘화,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8.15 해방 15주년 기념 경제 론문집』, 과학원출판사, 1960.
리상선,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하여」, 『근로자』 제7호, 근로자사, 1956.
_____, 『사회주의 건설에서 상업의 역할과 당의 상업 정책』,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9.
민주상업사, 『쏘베트 상업과 쏘련에서의 시장』, 민주상업사, 1949.
안함광, 「상업과 문화」, 『소비조합』, 북조선소비조합출판사, 1948.
엄재언 편, 『상업독본』,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9.
전용식,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상업의 발전」, 『인민 경제의 발전(론문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1954.
조룡식, 「우리나라 상업의 발전」, 『우리나라의 인민경제발전』, 국립출판사, 1958.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 경제 및 문화 발전 통계집』, 국립출판사, 1958.
최중극,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전시경제(1950-1953)』, 사회과학출판사, 1992.

김보영, 「해방 후 남북한 교역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2000.
김재웅, 「북한의 38선 접경지역 정책과 접경사회의 형성」, 『한국사학보』 제28호, 고려사학회, 2007, 123-178면.
_____, 「북한의 민간상업 통제정책과 상인층의 대응(1945-1959)」,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198-236면.
이주호, 「1945-1948년 북한 소비조합 정책의 전개」, 『역사와현실』 제96호, 한국역사연구회, 2015, 295-330면.
정경모 외, 『北韓法令集』 제3권, 大陸硏究所, 1990.
조성직, 「北傀의 商工業政策—個人商工業을 中心으로—」, 『北韓總鑑』,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조수룡, 「정전 후 북한의 사회주의 개조와 민간 상업의 몰락」, 『역사비평』 제124호, 역사비평사, 2019, 351-380면.

【Abstract】

During the 1950s, North Korea socialism commerce and 'Ok-sim's shop'

Lee, Ju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cline of private commerce and the growth of national commerce while analyzing North Korea's commercial policies in the 1950s. Completion of the private commerce cooperation, completed in August 1958, was a process of competition between state-owned commerce system and private commerce. After Liberation-At the time of the wa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s consistent with its policy of pressure on private traders, but also co-existed by giving individual traders a subsidiary role of poor national commercial networks.

However, after confirming the results of the recovery, the government raised the pressure on individual traders and tried to block the inflow of capital from the private traders, replacing them with national stores and consumer cooperatives. In addition, since 1955, people's purchasing power has increased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on. Since the government ultimately focused on the reproduction of socialism in carrying out 'Socialism Commerce', the government tried to structure the balanced exchange of commodity and purchasing ponds. Because of the loss, it was necessary to squeeze individual merchants and develop state-owned commerce system.

'Ok-sim's Shop', which appeared in 1955, was a commercial worker who entered the commercial network immediately after the war and faithfully implemented the government's policies. Kim's business approach focused on meeting the consumption of farmers who grew after agricultural cooperation while emulating and developing the business methods of individual merchants while carrying out the government's policies. The farmers' consumers were taken from the non-organizational market to the organizational market, ultimately establishing concrete socialism reproduction system.

In the 1950s,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ommercial policy was a statement for the increase of the people, focusing on establishing a socialist reproduction structure for the planned economy.

* Lecturer, Dept. of History, Jeju National Univ.

Keywords: North Korea, Commerce system, Socialism commerce, Consumer cooperatives, Market, Merchant, Kim ok-sim, Ok-sim's shop, State-owned commerce system, Commerce network.

접수일: 2019.09.30. || 심사일: 2019.10.08. || 게재확정일: 2019.11.15.